

삼성·SK하이닉스, 이사진 보수 정비... 반도체 성장 대응

삼성전자, 이사 보수 최고한도 기존 360억 → 450억으로 상향
반도체 기술진 중심 이사회 재편
SK하이닉스, 보수액 동일하지만
주식 보상으로 자사주 3만주 추가
반도체 전문가 이사회에 배치



삼성전자 서초사옥.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진 보수 한도 조정과 함께 반도체 기술 전문가를 이사회에 전면 배치하는 안건 등이 주요 관련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며 SK하이닉스는 오는 25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삼성전자의 주요 안건으로는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 사내·사외이사 선임 ▲ 정관 일부 변경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 보수 최고 한도를 기존 3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5% 가량 상향되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보수 한도를 43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16.3% 줄이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보수 한도는 일반보수 260억원, 장기 성과보수 190억원으로 구성했다. 이사 수는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직무와 경영 성과, 대내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시스

외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 체제 정비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1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내년에는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진을 중심으로 이사회 재편에 나선다. 김용관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

문 경영전략총괄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허은영 서울대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도 상정된다.

다만 주요 관심사로 거론됐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이사회 보수 한도를 축소할 것과 달리 올해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확대한다. 회사는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를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반면 올해는 기존 150억원에 더해 현금과 별도로 장기 성과급에 대한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을 올린다. 보수액 150억원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주식 보상으로 자사주 3만주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3만주는 보통주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300억원 규모다. 이는 삼성전자와 합치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차선용 미래기술 연구원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반도체 기술진을 이사회에 배치했다.

차 원장은 SK하이닉스에서 D램 코어 TF 담당, D램 개발 담당 등을 맡은 반도체 기술 전문가다.

회사는 차선용 차세대 메모리 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이끌어 온 반도체 기술 리더로 평가하며 "고도화되는 기술 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경영 체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범용 D램 등 관련 부품 공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조항도 손질된다. 개정된 상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은 이사총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추진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 telecom 배당 재원 확충 kt 대표이사 공식취임 LGU+ 데이터센터 도약

SKT, '규제·보안' 이사회 구성
KT, 실무형 전문가 체제 탈바꿈
LG U+, '안정 운영·재무 통제' 무게

통신 3사가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체제 정비에 나선다. 사내외 이사 선임과 배당 정책 조정, 사업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이 일제히 상정되면서 각사가 준비 중인 중장기 전략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중심의 사업 재편 흐름 속에서 통신사들의 경영 전략 변화가 주총 안건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

해보면 오는 24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6일 SK텔레콤, 31일 KT가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대략적으로 상법 개정에 맞춘 정관 변경안을 처리하고, 이사회 구성 개편과 배당 정책 조정 등 주요 경영 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정재현 최고경영자(CEO)의 사내이사 선임과 배당 재원 확충에 주력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태 여파로 분기배당과 기말배당을 중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주주들에게 배당소득

세 면제 혜택이 있는 감액배당을 실시해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사회 구성도 규제 대응과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 법제 전문가인 이성업 고려대학교 교수와 AI 분야 권위자인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 글로벌 자본 시장 전문가인 임태선 전 골드만삭스 한국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영입해 거버넌스 공백을 메우고 해외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KT는 주총에서 박용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의 대표이사 공식 취임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진행한다. 박 내정자는 취임 후 AI와 데이터센터, 6G 통신망 등

기술 현안을 중심으로 조직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또 B2B 전문가인 박 대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B2C 사업 강점이 있는 박현진 사내이사 선임도 추진하며 경영진 구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실무형 전문가 체제로 탈바꿈한다.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 출신인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사장을 영입하고, 네트워크 전문가 김영한 숭실대학교 교수와 회계 전문가 서진석 EY한영 전 대표 등을 합류시켜 전문성을 높인다.

가장 먼저 주총을 치르는 LG유플러스는 종합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의 도약을 선언한다. 정관을 고쳐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 운영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 펀딩, 전력 사용 승인까지 사업 범위를 전방위로 넓힌다. 내년 준공 예정인 파주 AI 데이터센터를 필두로 그룹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 LG'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안정적인 운영과 재무 통제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이상우 경영전략 부문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해 계열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여명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해 AI 인프라 확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

고려아연 vs 영풍·MBK, 의결권 대리행사 두고 신경전

고려아연, 대리행사 권유 업체 고소
영풍·MBK "모든 절차 내부통제 거쳐"
이사 선임 규모도 '5인 vs 6인' 엇갈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영풍·MBK)가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의 고려아연 사칭 의혹을 둘러싼 사실 여부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이번 주총 안건 평가에 대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서울중로경찰서에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고소에서 해당 직원들이 자신을 고려아연 측 사람으로 꾸미고 주주들과 접촉했던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사원증처럼 생긴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을 만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 '고려아연' 사명이 적힌 안내문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들이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으로 오인하고 위임 여부를 검토·결정했다 주장이다. 또 지난 2025년 임시주총을 앞두고도 '고려아연' 사명이 함께 적힌 명함을 배포, 혼란을 줬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를 진행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모든 권유 절차를 법률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했으며 위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함 등에도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표시했을 뿐, 영풍·MBK 대리인임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및 3월 정기주총에서 불법적인 상호

주 형성을 통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측은 ISS 자문 보고서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맞붙고 있다.

ISS는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인 이사 선임 규모에 대해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인 선임안'에 찬성을 권고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분리선출 감사위원 1석을 별도로 뽑기 위해 한 자리를 남겨두는 구조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영풍·MBK가 제안한 '6인 선임안'에 대해서는 단기적 전략적 이익을 위한 주장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사 후보 개인에 대한 권고에서는 양측 모두 일부 지지를 받았다. 다만 결정적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는



/양성운 기자 ysw@metro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업계, 약가인하 마지노선 '10%' 통첩

약가제도 개편에 비상 경영체제 돌입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맞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업계는 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 연간 3조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약가 인하 폭 10%'를 마지노선으로 정부에 최후통첩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 제네릭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현행 53.55%에서 40%대

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건강심사원에 상정되지 않아 연기된 상황이다.

비대위는 우선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줄였다.



/이청하 기자 mlce236@metro